

공공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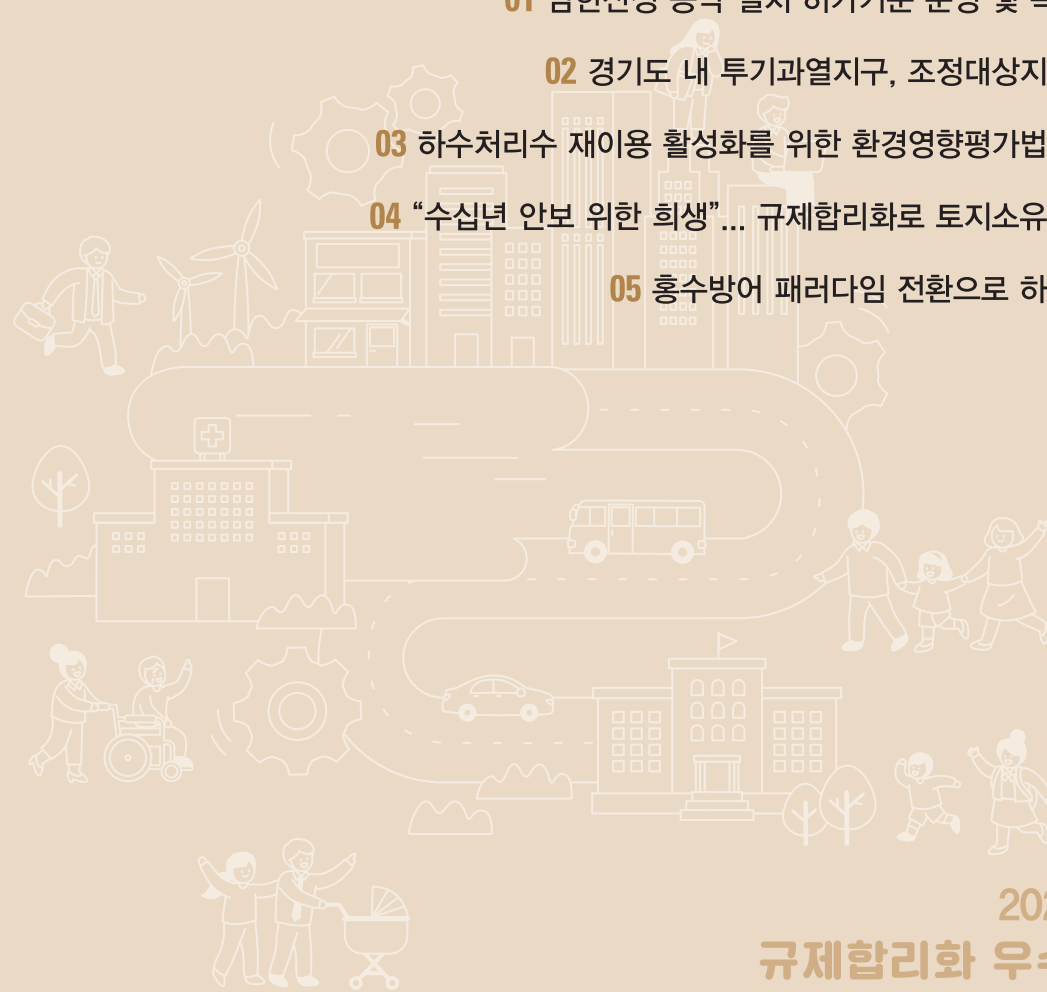
01 남한산성 농막 설치 허가기준 운영 및 녹지조성 추진

02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추진

03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04 “수십년 안보 위한 희생”... 규제합리화로 토지소유자 권리 회복

05 홍수방어 패러다임 전환으로 하천 규제 개선



2022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2022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01 남한산성 농막 설치 허가기준 운영 및 녹지조성 추진

추진부서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 031-8008-5186

개선배경



-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21.7.1. 시행)으로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세계유산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대규모 농막단지 형성으로 도립공원 및 문화재 훼손 우려
 - 남한산성 도립공원(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지 현황
: 184필지 182천㎡(성곽 內 142필지 108천㎡, 성곽 외 42필지 74천㎡)

개선내용



개선 전

-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21.7.1. 시행)으로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세계유산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대규모 농막단지 형성으로 도립공원 및 문화재 훼손 우려



개선 후

-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농막 설치 허가기준”을 마련('21. 6. 29.)하여 운영
 - ※ 허가기준
 - 산성리(남한산성 성곽 內) : 농막 시설 설치 불가
 - 산성리 외 지역(남한산성 성곽 밖): 농막 시설 설치 제한적 허용*
- 남한산성 성곽 내 녹지조성(자연환경 복원) 계획 수립('21. 9. 15. 도지사 방침결재) 및 추진
 - 주요내용 : 성 內 주요 농지 매입 (공원시설 지정 후 토지 수용) 후 공원 및 휴식공간 조성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는 설치 불가, 외관은 무광 밤색 및 검회색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원색 사용은 지양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농막 설치 허가기준 마련 및 운영

- 2021. 06. 24. 농막 설치 허가기준 법률자문 의뢰 및 회신
■ 회신내용 : '재량의 일탈 및 남용 사항 없음' 고문변호사 3인 의견 일치
- 2021. 06. 28.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기준 고시알림(환경부)
- 2021. 06. 29. 농막 설치 허가기준 검토보고
- 2021. 07. 20. 농막 설치 허가기준 알림(센터→성남, 광주, 하남)
- 2022. 01. 14. 남한산성내 농막 1개소 축조신고 업무협의(광주→센터)
- 2022. 01. 27. 농막 축조 남한산성세계유산 관리위원회 심의
■ 의견수렴 결과 : 센터의견인 '허용 불가 처리' 적정

남한산성 성곽 내 녹지조성(자연환경 복원) 계획 수립 및 추진

- 2021. 09. 15. 남한산성 도립공원 녹지조성 계획 도지사 방침결재
■ 소요예산 : 241.6억원(토지매입 145, 녹지조성 96.6)
■ 사업기간 : 2023~2027년(5년간)
- 2021. 10. 25.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알림(예산담당관→센터)
■ 심사결과 : 조건부(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추진
- 2022. 03. 31.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의회 본회의)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22. 05. 26. 공원시설 결정고시

향후계획 기본설계 및 토지매입 추진

개선효과



- 농막 설치 허가기준 마련 및 운영으로 세계유산 남한산성에 무분별한 농막 등 난개발 방지를 통해 역사·생태적인 경관 유지 및 일관된 인허가 처리 시행
- 남한산성 성곽 내 경관이 불량하고 농막 건축이 허용된 농지를 매입 후 녹지로 조성하여 국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역사 문화재 배후경관 개선·보전
- 녹지조성으로 자연생태 가치를 보존하고, 휴양·체험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생태관광 등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02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추진

추진부서 경기도 주택정책과 ☎ 031-8008-4932

개선배경



- (규제지역) 물가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하게 높은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등을 위해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 (투기과열지구) 주택 투기가 성행(우려)하여 주택가격 안정이 필요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우려) 되어 대응이 필요한 지역
- (적용규제) 규제지역 유형에 따라 대출·세제·전매제한 등 규제 적용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추진 필요

개선내용



- 국토부 주거정책심의회의 의결로 경기도 일부 시·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 구 분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 | 14개(12개 市) 지역 | 28개(20개 市) 지역 |
| '22.11.14 이전 | 과천, 광명, 하남, 성남(분당, 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 과천, 광명, 하남, 성남, 구리, 안양(동안·만안), 의왕, 고양,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광교지구), 용인(수지·기흥·처인), 남양주, 화성, 동탄2,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
| '22.11.14 이후 | 5개 지역·지구(4개 市) : 과천, 광명, 하남, 성남(분당, 수정) | |

※ 일부 시·군의 세분화된 지역표기 생략



- 2022. 경기도 주택시장 동향분석(10회)
경기도 내 규제지역 해제 추진계획 수립
경기도 내 불합리한 규제지역 지정 해제 관련 국토부 건의(5회 이상)

개선효과



- (대출 규제 완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22년 11월 기준)
 - 투기과열지구 해제 : LTV 비율 완화 0(15억 초과)~40%(9억 이하) ⇒ 70%
DTI 비율 완화 40% ⇒ 50%(1주택자) ~ 60%(무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해제 : LTV 비율 완화 30(9억 초과)~50%(9억 이하) ⇒ 70%
DTI 비율 완화 50% ⇒ 50%(1주택자) ~ 60%(무주택자)
- (세제 혜택) 양도소득세 등 완화에 따른 도민 부담 경감
- (전매 제한 해소) 주택 매입시 발생하는 전매 행위 제한 규제 완화
- (청약) 재당첨, 청약 자격 완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7호

「주택법」 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2. 해제일 : 2022년 11월 14일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 시·도 | 현 행 | 조 정 (2022.11.14.) |
|-----|---|---------------------------------|
| 서울 | 서울특별시 전역 (25개區) | 좌동 |
| 경기 |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주1)} ,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주2)} |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

주1)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2) 화성시 반송동 ·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 목리 · 방교리 · 산척리 · 송리 · 신리 · 영천리 · 오산리 · 장지리 · 중리 ·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

「주택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성남시 일부(중원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팔달구 · 영통구 · 권선구 · 장안구, 용인시 수지구 · 기흥구 · 처인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인천광역시 중구 · 동구 · 미추홀구 · 연수구 · 남동구 · 부평구 · 계양구 · 서구, 세종특별자치시

2. 해제일 : 2022년 11월 14일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 시·도 | 현 행 | 조 정 (2022.11.14) |
|-----|--|-------------------------------------|
| 서울 | 서울특별시 전역 (25개區) | 좌동 |
| 경기 |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주1)} ,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주2)} , 수원시 (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 ^{주3)} , 화성시 ^{주4)} ,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 ^{주5)} , 시흥시,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주6)} , 오산시, 광주시 ^{주7)} , 의정부시, 김포시 ^{주8)} | 과천시, 성남시 ^{주11)} , 하남시, 광명시 |
| 인천 | 중구 ^{주9)} ,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전역 해제 |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주10)} | 해제 |

※ 주11) 중원구 제외, 이외의 주석표시 생략

03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추진부서 경기도 상하수과 ☎ 031-8008-6994

개선배경



- 환경영향평가 비대상인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5,000㎡ 이상, 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 도시지역 60,000㎡ 이상 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 제4호에 따라 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급관로)은 제외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었음.
* 가스관, 송유관, 송전선로, 상수관로, 하수관로 등

[피해사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시 수요처 재이용수 공급을 위해 공급관로는 대부분 도로나 하천부지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실정으로, 공급관로를 도로에 설치 시 당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환경보전 취지와는 다르게 하수 재이용 사업의 규제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관련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

개선내용



| 개선 전 | 개선 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시 도로에 매설되는 공급관로를 사업면적에 포함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판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시 도로에 매설되는 공급관로는 사업면적에서 제외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판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완화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재이용수 사용기업의 신속한 용수 확보 및 산업 경쟁력 향상의 효과가 기대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법령 신규조문 대비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 제4호 | |

| 개정 전 | 개정 후 |
|---|---|
| <p>비고</p> <p>4.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간 생략)</p> <p>마. 「도로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 설치사업 및 「하수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하수관로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로만 해당한다) 설치사업(「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이하 생략)</p> | <p>비고</p> <p>4. _____ _____</p> <p>(중간 생략)</p> <p>마. _____ 「하수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하수관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급관로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로만 해당한다) 설치사업(_____)</p> <p>(이하 생략)</p> |

[삼성전자 하수재이용 활성화 사례]

매일경제

2022년 12월 01일 (목)
기업 13면

삼성전자, 年 1억7300만t 반도체용수 확보

환경부·경기도 등과 협약

하수처리장서 공급받은 물
독자기술로 초순수 만들어

삼성전자가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통해 연간 1억7300만t에 달하는 공업용수를 확보하게 됐다.

30일 삼성전자는 환경부, 경기도와 5개 시(수원시·용인시·화성시·평택시·오산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이날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캠퍼스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 대표이사, 지

반도체단종 등 이 참석해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원·용인·화성·오산시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반도체 사업장에서 필요한 공업용수 수준으로 처리해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사업장에서 공급받게 된다. 각 사업장에 공급된 방류수는 추가 공정을 통해 초순수로 만들어져 반도체 생산에 사용될 예정이다.

반도체 라인 증설에 따라 2030년이 되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 필요한 공업용수가 현재의 2배 이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 9월 '신환경영향평가'에서 2030년까지 반도체 국내 사업장의 '물

취수량 증가 제로화'를 밝힌 삼성전자는 취수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전자가 공급받을 수 있는 용수는 하루 약 47만4000t, 연간 1억730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 대표이사는 "초순수라는 깨끗한 물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하수 재이용수를 사용한다는 건 큰 패러다임 변화"라면서 "혁신적인 용수 재이용기술을 개발해 정부, 지자체와 수자원 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찬홍 기자





- '22. 04. 25. 하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건의
- '22. 05. 10. 환경부 개정건의 배경 · 내용 등 설명 및 물 재이용사업 관련 자료 제공
- '22. 08. 30. 환경부 적극행정심의회 안건 상정
- ~09. 02. - (심의결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선제적 조정을 위해 '법령 개정 전 시행' 결정

개선효과



-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측면
 - (산업지원) 기업체 용수공급 지원을 통한 산업 혁신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
 - (재이용율 제고) 현재 경기도 하수 재이용율 17.1%(전국7위) 상승
 - (물 여유량 확보) 기존 수원 대체를 통한 물 수요관리에 기여
 - (생활환경 개선) 악취개선 및 주민후생 개선 등 친수환경 제공
 - (기후변화 적응) 이수안전도 제고, 상시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 구축
 - (물산업 발전) 고부가가치 물시장 육성 및 해외진출, 기술 고도화 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 기대
- 지자체(시 · 군)의 기대효과
 - (지역개발 촉진) 수질오염총량 감소*, 지자체의 개발수요 증대 가능
 - * 경기도 하수처리장 보급(95.1%)을 고려시, 재이용은 최선의 오염부하량 삭감 대안
 - (재정 인센티브) 물재이용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국고보조) 기대
 - (재이용 수익창출) 사업 및 참여 방식에 따라, 수입원 창출* 가능
 - * 하수원수 요금 징수(편당 직접 참여), 초과수익(BTO-a) 일부 할당 등
- 기업체의 기대효과
 - (ESG경영 실천)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업가치 충족, 제품판매 기여
 - (물이용부담금 절감) 팔당댐 원수에 부과 중인 170원/㎥을 절약 가능
 - (물 안전 강화) 기후변화, 물문제 등으로부터 안전한 다중 공급원 확보

04 “수십년 안보 위한 희생”... 규제합리화로 토지소유자 권리 회복

추진부서 경기도 하천과 ☎ 031-8030-3662

개선배경



- 수원에 위치한 서호천은 하천 중심으로 좌측에 군부대(공군 제10전투비행단)가 위치하고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하천폭 확장이 어려우니 그 반대편 사유지로 획일적으로 확장하여 서호천 하천구역 870,027㎡가 설정되어 있었음.
-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하천구역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위 가능

[피해사례] 하천구역으로 결정된 사유지에서는 건축, 개발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하천관리에 지장 없는 범위 내의 공작물, 수목식재 등 제한적 행위만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관련규정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 잠정제방을 도입하여 사유지 95필지 28,608㎡ 하천구역 제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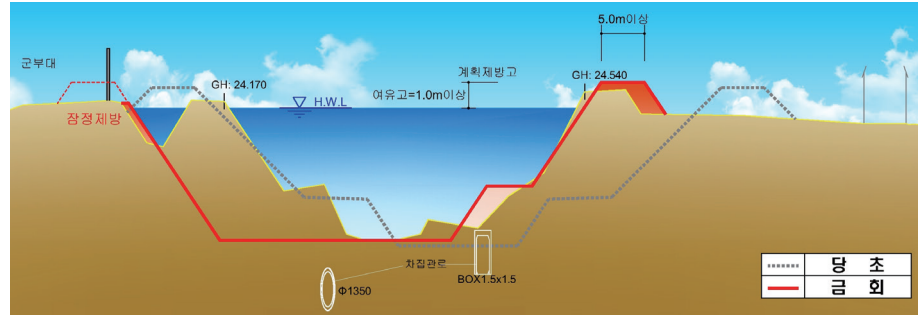
개선내용



| 개선 전 | 개선 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9월 서호천 하천기본계획에서 계획제방부지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토지 870,027㎡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하고 사유지에 대하여는 건축 및 개발행위 등 토지소유자 권리 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부대 구간 잠정제방 도입으로 하천구역에서 제척된 사유지 95필지 28,608㎡에 대하여 건축 및 개발행위 등 토지소유자 권리 행사 가능 |

- “잠정제방”은 지역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단계적 제방을 설치하는 방법으로써 완벽히 홍수를 방어하는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간 도입한 사례가 없었으나, 군부대의 장래 이전 계획과 사유지의 과도한 규제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 그룹의 기술적 검토 절차를 거쳐 도입하였음.

[잠정제방 도입 전후 비교 도면]



- '14. 09. 30. 서호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구역 결정
- '19. 05. 30. 서호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 09. 26. 주민설명회(주민건의사항 : 사유지 편입 최소화 요청)
- '21. 07. 01. 군부대 협의 지연에 따른 잠정제방 검토
- '21. 12. 01.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 ※ 과도한 사유지 편입으로 주민 불편 등 치수안전도에 대한 형평성을 제기하여 군부대 구간 잠정제방 도입에 대하여 “원안 의결” 심의 완료
- '21. 12. 22.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구역 변경 고시(경기도고시제2021-5215호)

개선효과



- 하천구역의 제척(사유지 95필지 28,608㎡)에 따른 사유재산권 행사 실현
 - ※ 규제해소에 따른 지가 상승, 기존 공장 증설, 신규 개발 및 건축 행위 등 가능
- 서호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시 민원 최소화 및 사업 면적 축소에 따른 예산(232억원) 절감
 - － 보상비 축소에 따른 총사업비 감소로 서호천 정비사업의 조기 완료 가능

05 홍수방어 패러다임 전환으로 하천 규제 개선

추진부서 경기도 하천과 ☎ 031-8030-3662

개선배경



- 2014년 수립된 원천리천 하천기본계획은 홍수방어를 위한 설계홍수량을 바탕으로 계획홍수위를 산정하고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홍수에 취약한 곳에 제방 계획 수립 후 하천구역을 결정하고 행위제한 등 사권행사를 제한하고 있음.
 - ※ 원천리천 하천구역 사유지 편입 현황 : 319필지 98,510㎡
- 국지성 호우 및 도시화에 따른 설계홍수량이 약 30% 증가되어 추가적인 홍수방어계획이 필요하나 하천 주변 주거지 및 삼성전자 단지가 위치하고 8차선 도로가 인접하여 계획홍수위를 반영한 교량 및 축제고 인상시 추가 사유지 편입 발생

[피해사례] 하천구역으로 결정된 사유지에서는 건축, 개발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하천관리에 지장 없는 범위 내의 공작물, 수목식재 등 제한적 행위만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관련규정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 홍수방어 패러다임 전환으로 사유지 133필지 17,063㎡ 하천구역 제척

개선내용



개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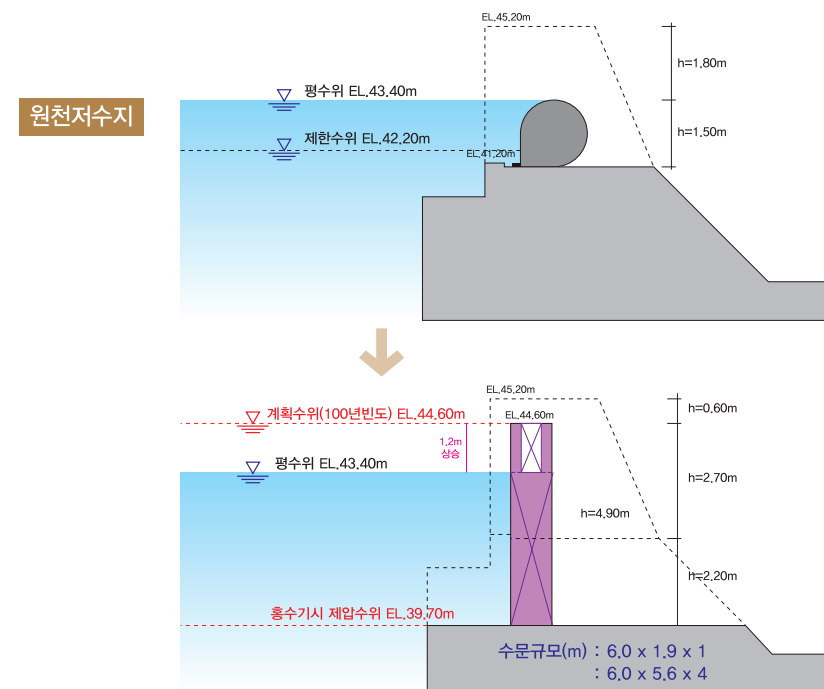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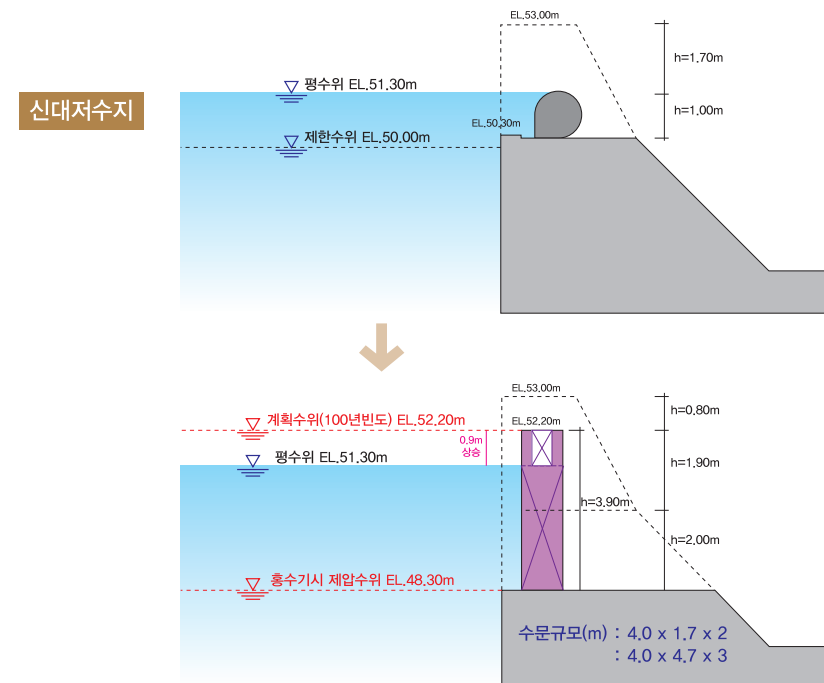
- 홍수방어를 위하여 제방축조나 하도정비를 시행하는 선개념의 치수계획으로 계획제방부지(사유지 포함)에 대하여 하천구역을 결정
 - ※ 사유지 하천구역 : 319필지(98,510㎡)
- 홍수시 유수소통에 방해되는 교량 9개소 재가설
 - ※ 삼성교의 경우 2.77m 도로인상 필요



개선 후

- 원천리천 상류에 위치한 신대·원천저수지의 홍수조절량(1,326천톤)을 확보하는 2차원적인 면개념의 유역중심 홍수방어계획 도입으로 기존 하천시설물의 치수능력 증대를 통한 사유지 규제 해소
 - ※ 사유지 133필지(17,063㎡) 하천구역 제척
- 교량 재가설 9개소중 5개소 존치
 - ※ 삼성교 교량상승고 (2.77m→0.62m)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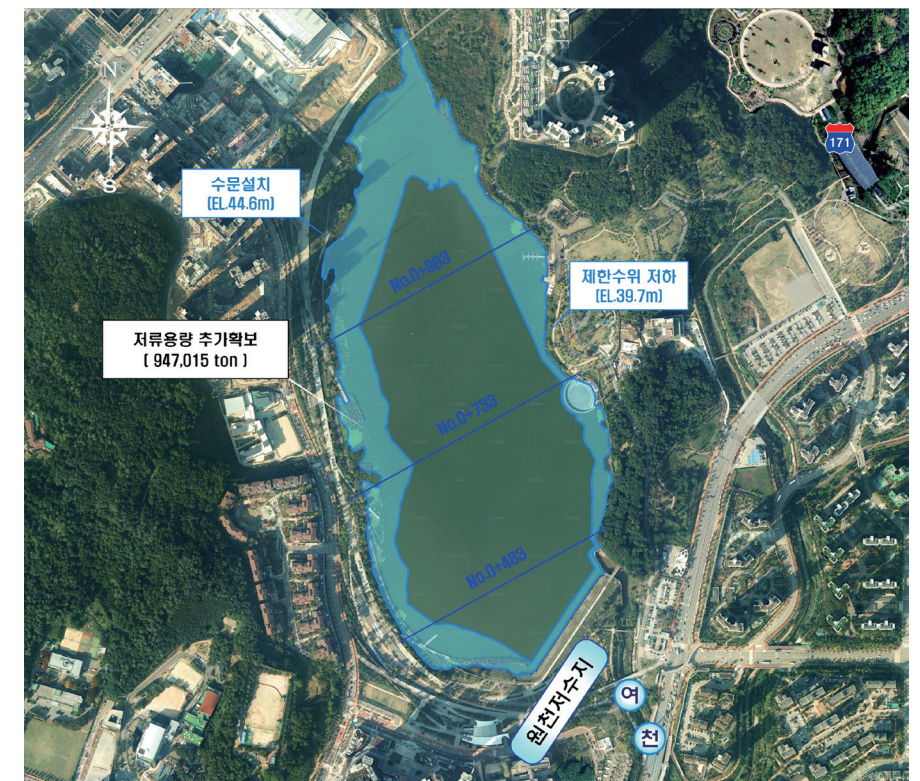
[저수수지 홍수조절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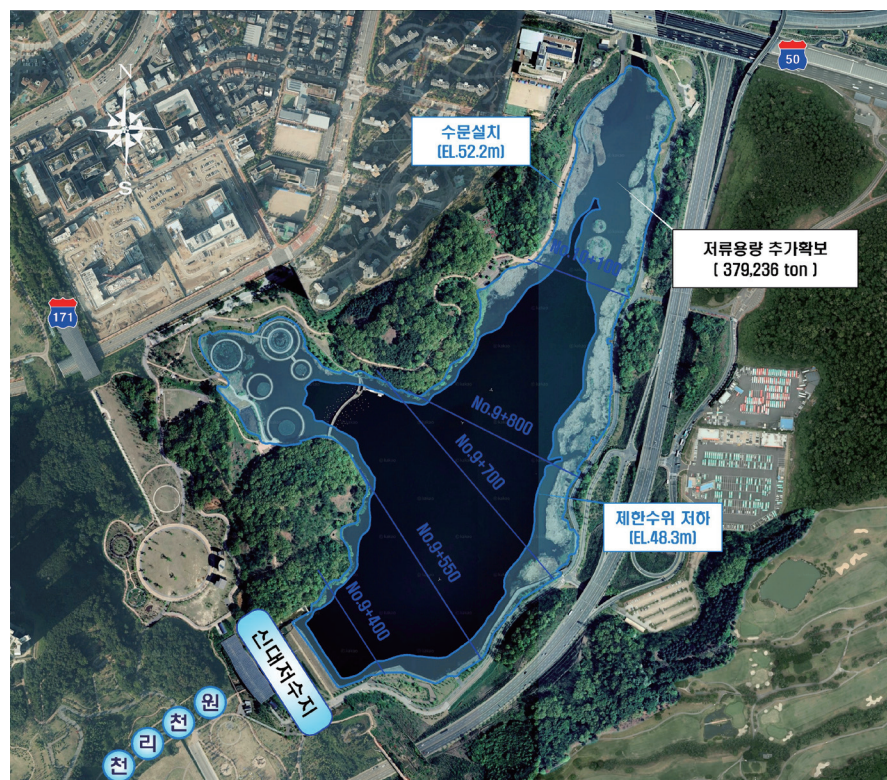
개선효과



- '14. 09. 30. 원천리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구역 결정
 - '19. 05. 30. 원천리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 '21. 05. 11. 저수지를 활용한 홍수저감방안 협의(수원시)
 - '21. 10. 15. 홍수저감에 따른 하류부 치수계획 변경 협의(수원시)
 - '21. 12. 01.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선개념→면개념 패러다임 전환)
 - '22. 07. 07. 원천리천 하천구역 변경 고시[경기도고시제2022-5124호]
- 하천구역 제척(사유지 133필지 17,063㎡)에 따른 사유재산권 행사 실현
※ 규제해소에 따른 지가 상승, 기존 공장 증설, 신규 개발 및 건축 행위 등 가능
 - 저수지를 홍수조절지로 활용하는 홍수방어계획(유역분담) 도입으로 하천정비사업비 약 813억원 절감
※ 저수지 수문공사(110억원) 우선 시행으로 영통구청 및 삼정전자일원 홍수 피해 예방



원천저수지



신대저수지